

# 非수도권 '지역 균형' 비중 확대... 혈세낭비 논란

## 예타 대수술...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 회의 내달부터 이원화... 낙후지역 배려 수도권 배점비율 줄고 비수도권 증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방과 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통과가 쉬워지고, 예타 종합평가를 정부 부처에 설치될 위원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정치권 등의 '외풍'이 개입할 소지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비타당성조사 커트라인' 낮췄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율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율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뒀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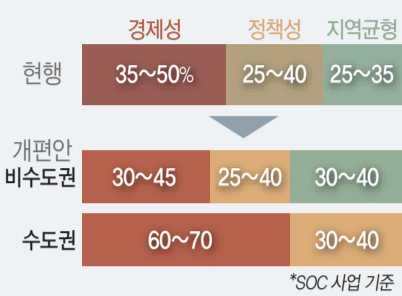
30~40%로 5%p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에,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주요 내용

■ 종합평가 비중 이원화(수도권·비수도권)\*



### ■ 정책효과 평가 항목 신설

- 일자리 효과  
직접 고용효과(현행) + 간접 고용효과 등
- 주민생활여건 영향  
공공서비스 접근성, 건강·생활불편 개선 등
- 환경성 평가  
부정적 환경영향(현행) +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 안전성 평가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 자원조달 위험성 평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 평가

### ■ 조사기관 추가

	현행	개편안
SOC·非R&D (건축, 복지 등) 사업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조세재정연구원
R&D 사업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조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철도는 1년 6개월)

### ◆혈세 낭비 부실 계약 vs 지역 균형발전 사업 탄력

시민단체는 '국가재정 낭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예타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계약"이라며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예타를 통과하고도 실패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토건 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건설·운영비로 수십 년 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해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면제한 예타 규모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해 100조 원에 이른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한다는 이번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별 맞춤형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던 정책성평가 항목에 간접고용효과를 신설한 데 대해서는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토건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건설산업 구조상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시키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예타제도와 같이 도입된 사후평가제도를 더 강화해 혈세를 더 알뜰하게 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되면 제2의 외환위기를 촉진하는 방아쇠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도 목소리를 달리한다.

서울시는 불편한 속내다. 그간 35~50%였던 예타 경제성 배점 비율을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비수도권은 60~70%로 높이면 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심하고, 강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며 "경제성 배점 비율을 높이면 저희가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사업이 이번 예타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북도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이 비수도권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시는 예타 개편안에서 비수도권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기로 함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예타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 지방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동쪽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예타 개편으로 그동안 담보상태인 300명상 규모 공공의료시설 대전의료원(2025년 11월 개원 목표)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영구채도 부채로 분류... 자본잠식 기업 증가 전망

## >> 1면 '회계의 습격...'서 계속

### 차입금의존도·부채비율 상승 불가피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각종 형태의 리스, 렌탈, 임차, 용선 등의 비중이 높은 업종 및 기업, 특히 현재 운용리스, 부동산 임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투자 김상만 연구원은 "부

동산, 항공기, 선박 등 대규모 영업자산을 운용하는 소매유통사(백화점, 편의점 등), 항공사, 해운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활용 비중이 다른 경우 영향을 차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 ◆원칙중심 회계는 기업의 경제 실질 반영, 회계역량 강화해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습격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회계상 자본이 아닌 부채

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출했다. 영구채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급증해 자본잠식에 빠지는 기업이 등장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침체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들은 영업권 리스크까지 걱정이다. 롯데하이마트, CJ CGV, 인터파크, 큐렉소, 한세실업 등은 지난해 피인수기업의 부실을 반영하면서 적자나 부진할 실적을 냈다.

김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 웅진에

너지와 같은 신용이슈 및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결산실적 부진 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길 숭실대 교수는 한국회계학회·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 회계 3차 특별세미나'에서 "원칙중심 회계의 본질은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진이 회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정치경제 부장

### <반도체 재료 시장> (단위: 억 달러)

지역	2017	2018	성장률
대만	103.0	114.5	11%
한국	75.1	87.2	16%
중국	76.3	84.4	11%
일본	70.4	76.9	9%
기타 지역	58.1	62.1	7%
북미	52.9	56.1	6%
유럽	33.6	38.2	14%
합계	469.4	519.4	11%

/자료=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

### 반도체 재료시장 10% 성장 韓 성장률 1위... 역대 최고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이 10% 이상 성장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세미)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반도체 재료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반도체 재료시장은 519억달러 매출로 전년 비 10.6%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 가장 많았던 2011년(471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다. 웨이퍼 재료는 322억달러로 15.9%, 패키징재료는 197억달러로 3.0%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대만이 114억달러로 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2위로 올라섰고, 중국은 3위로 내려갔다. 성장률로는 한국이 16%로 가장 많았다. /김재용 기자 juk@

# 애매한 산정방식에 결정요인 공개 요구 잇따라

## >> 1면 '일부단지 단체행동 등...'서 계속

이런 상황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커뮤니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이용해 공시가격 관련 의견제출을 유도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발표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

됐다.

게시글 중에는 "공시가격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옆 단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 등의 이유로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공유하며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공동으로 의견제출 및 이

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 연명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정방식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구리, 동탄, 판교, 용산 등 공시가격이 크게 뛴 일부 단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나서는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등 개별성이 강한

데 공시가격은 겉(동·층수 등)만 평가해서 나온 것"이라며 "백프로 현실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산정된 공시가격엔 층별효용지수, 위치별효용지수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동, 층, 향 등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른 것"이라며 "다만 적정성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시 평가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